

#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11. 18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과 전망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 ① 일본경제지표

###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주가 상승과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영향으로 약세
- 장기금리 :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과 세계적인 주가상승 영향으로 상승세

구 분	11.11(월)	11.12(화)	11.13(수)	11.14(목)	11.15(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98.97	99.48	99.55	99.68	100.25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072.18	1,077.28	1,074.82	1,080.63	1,066.66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4,269.84	14,588.68	14,567.16	14,876.41	15,165.92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590	0.600	0.605	0.605	0.630

###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3분기 실질 GDP성장율은 전기비 0.5%, 연율 1.9%로 4분기 연속 플러스
- 2013년 9월 경상수지는 5.9천억 엔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폭이 확대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			3.8			1.9(P)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60	-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69	-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4.57	-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2.72	-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			-	
對한국 투자	(40)	7.7			9.1			-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0.3	0.1	-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4.1	4.0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1.6	5.9	-	
엔화 환율	對미달러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97.9	99.2	97.9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1,142	1,095	1,090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12.7	12.8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0.680	0.590	

주1. (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1차 속보치

###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냉각된 한일경제관계를 생각하는 3가지 시점 : 글로벌화, 엔저·원고, 한국사법의 움직임』 일본종합연구소, 11월12일

\*출처:<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focus/pdf/7106.pdf>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정책의 거시경제 정책적 도입에 관한 조사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소, 11월12일

\*출처:<http://www.nistep.go.jp/wp/wp-content/uploads/NISTEP-RM226-Full-J.pdf>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과 전망

### □ 성장율은 둔화되었으나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일본 내각부가 11월 14일 발표한 2013년 3분기(7~9월) 실질 GDP성장율은 전분기 대비 0.5%, 연율 환산으로는 1.9%(명목성장율은 0.4%로 연율 1.6%)
- 2분기의 연율 3.8%에 비하면 성장률이 떨어졌으나,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
- 공공투자와 주택투자가 성장을 견인한 반면, 소비와 수출은 부진

### □ 공공투자가 GDP 성장에 크게 기여

- 실질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국내수요가 0.9%포인트로 크게 기여한 반면, 외수(수출-수입)는 마이너스 0.5%포인트로 3분기 만에 GDP성장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일본정부의 경제대책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공공투자가 6.5% 증가하였고, 주택 투자도 소비세 증세를 앞둔 가수요의 영향으로 2.7% 증가
- 개인소비는 0.1% 증가에 그쳤으나 4분기 연속 플러스
  - 자동차와 보석장식품 등 고액 소비가 견조한 반면, 주가 상승세의 중단에 따른 증권매매수수료 감소로 전분기의 증가율(0.6%)을 하회
- 화력발전과 자동차 등 수송기계 분야의 설비투자가 견조세를 보여 3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으나, 증가율은 0.25%로 전분기의 1.1%에 비해 둔화

### □ 수출은 부진

- 수출증가율은 ▲0.6%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
- 對아시아 수출이 감소한 것 외에, 對미국 수출도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이 현지 공장에 생산을 이전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감소

### □ 여전히 디플레이션 상태

- 종합적인 물가동향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비 ▲0.3%로 전분기(▲0.55%)보다도 하락폭이 적으나, 디플레이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 GDP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와 계산법이 달라, 국내물가와 수출물가의 합계에서 수입 물가를 공제하여 산출됨
- 따라서 고유가 등 수입가격 상승이 디플레이터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GDP디플레이터 전체로는 마이너스가 되었음

## □ 민간수요 주도의 회복에 불안요소

- 3분기 GDP 속보치는 경제대책과 소비세 증세 등 정책의 효과가 컸음
  - 2012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공사업의 집행, 그리고 증세이전 가수요 요인도 작용한 주택투자의 경기부양 효과가 컸음
  - 일본정부는 금년 2월에 발표한 긴급경제대책을 통해, 내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2분기 GDP성장율을 높이는데 주력했는데, 2분기까지 고주가 등에 힘입어 개인소비가 예상 외로 호조를 보임
  -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금융완화가 2분기까지 경기를 견인한데 이어, 두 번째 화살인 재정지출이 3분기 경기를 견인하는 형태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남
- 그러나 재정지출의 효과는 조금씩 감소할 전망
  - 감소로 반전된 수출과 부진한 설비투자를 고려하면, 민간수요 주도의 회복은 여전이 불안하다는 지적

## □ 감세에 의한 투자촉진책의 성공여부가 선순환의 분기점

- 앞으로 초점은 투자회복의 지속력임
  - 설비투자과 관련하여, 아마리 경제재생담당대신은 경제대책으로 감세를 준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발언
  - 감세를 발판으로 투자를 늘리려는 일본정부의 의도가 적중할지의 여부는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실현에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고정급여와 특별급여의 증가 등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수출도 엔저 흐름을 타고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4분기(10월~12월) 이후는 소비세 증세이전 가수요가 본격화될 공산이 클 것이나, 내년 4월 소비세 증세 이후에는 수출회복 여부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 이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동안에 성장을 위한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통해 설비투자를 늘려, 수출확대에도 이어지게 하는 것이 증세 이후 성장력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임

### 3 경제정책동향

#### □ 일본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 지역 독점으로 경쟁이 억제되어왔던 일본의 전력시장이 60년 만에 개혁
  - 가정용을 포함한 전력사업의 신규진입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1월 13일 통과
  - 발전 및 소매 분야에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을 선택할 수 있고, 요금경쟁을 통한 혜택도 확대될 전망
- 개정된 전기사업법에서는 2020년까지 3단계 개혁을 추진
  - 제1단계는 일본 전국에 걸쳐 10개 지역에 사실상 독점되어 있던 시장의 통합하고, 2015년에는 지역간 전력을 융통하는 광역기관을 설립
    - 10대 전력사별 관할구역이 해체되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전국 수준의 인프라가 정비됨에 따라, 규슈의 전력회사가 관동지역의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기가 쉽게 됨
    - 전력사업은 발전, 송배전, 소매 등으로 대별되는데, 1990년대부터 기업용 전력판매의 자유화가 시작되었으나, 대형 전력회사들에 의한 지역독점은 거의 방치되어 신규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제2단계는 소매부문의 자유화로 광역기관 설립으로 발전사업의 채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신규진입의 증가가 확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전력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가정용 전력소매사업도 2016년에 자유화
    - 신규 진입한 소매사업자는 전국 어느 가정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휴대전화와 전력의 세트 판매 등 각각 실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제3단계는 2018~2020년에 전력회사로부터 송배전부문을 분리, 중립성을 높인 송배전망을 사용하여 발전 및 소매 분야의 경쟁 환경을 정비
- 과거 통신자유화 분야에서 NTT와 신전전(新電電)간의 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을 토대로, 전력자유화 분야에서는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 전력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의 공시도 의무화
  - 신규진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점이 발생하여 요금이 비싸질 가능성도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지속된 일본의 전력제도 개혁이 시작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업계의 맹주격인 동경전력이 공적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임
- 그러나 앞으로 7년간 개혁이 예정한 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미지수
  - 전면 자유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기사업연합회가 개혁에 반발

- 11월 13일 통과된 개정 전기사업법에서도 소매자유화는 법률의 본칙이 아니고 부칙에 담겨져 있음
- 경제산업성은 2014~15년도에 전력자유화를 추진하는 추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 시점에서 개혁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음

## □ 일본정부, 금융분야의 성장전략 마련

- 일본정부는 금융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적연금제도 창설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을 마련키로 함
  - 새로운 연금제도는 미국을 모델로 세제상 우대조치를 도입하여, 1,500조 엔에 달하는 가계 금융자산을 투자로 전환케 하기 위함인데, 금년 중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말까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
  - 금융에서 창업과 재편을 촉진하는 동시에, 아시아 진출도 지원할 계획인데, 1998년 금융 빅뱅의 후속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금융 빅뱅은 은행과 증권업무의 경계 철폐 등의 자유화가 중심이었는데, 새로운 전략에서는 연금 등 개인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 및 규제를 재검토
  - 아베 정부가 금년 6월 발표한 성장전략에 금융 분야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의도도 있음
- 첫째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퇴직계정(IRA)를 일본에도 창설하여, 개인들의 주식 및 투자신탁 투자를 촉진
  - IRA는 일정 연령까지 개인이 자금을 적립하여 운영한 결과, 발생한 이익을 노후에 받는 제도임
  - 내년 1월에 시작되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의 비과세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구체적으로는 5년 비과세기간을 보다 늘림
  - 도입된 지 약 20년 경과한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완화도 논의 중
    - 일본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사원의 주식거래를 과도하게 자율규제하고 있다고 보고 사내 물의 완화를 요청할 방침인데, 규제에 저촉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할 예정
- 둘째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임
  - 창업 직후 자금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벤처에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엔젤 세제를 확충하고 외국과 비교하여 취약한 벤처캐피털 육성안도 재검토하여, 민간자금을 인프라 정비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
- 셋째는 일본기업의 아시아진출을 지원
  - 금융규제와 거래소 등의 금융인프라도 아시아 지역 내 표준화를 목표
  - 엔화와 현지통화의 직접교환 시스템구축방안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들과 협의

## 4 일본기업동향

### □ 아시아 지역에 일본중소기업용 임대공장단지 정비

- 일본 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본정부가 아시아 각국에서 임대공장 공업단지 정비에 착수
  -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 일본 중소기업체들의 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북부지역에 100개사 규모의 공업단지를 정비하는 민간기업의 계획을 해외투융자 등으로 지원
  - 앞으로 5년간 중견·중소기업 10,000개사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성장전략의 일환
- 대기업용 공업단지는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임대공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은 임대공장단지 조성의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는데, 수도 하노이 인근에 일본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공업단지를 정비
  - 이토추상사의 자회사인 이토추로지스틱스 등이 설립한 공동회사가 JICA의 엔차관을 이용하여 사업화 조사를 시작
  - 도요타자동차와 혼다자동차 공장이 가까워 현지조달을 위해 자동차부품업체가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공업단지 정비비용은 50억~60억 엔, 이중 최대 70%까지를 해외투융자로 충당할 전망
- 일본의 중소기업체들 가운데는 중국에 생산거점을 가진 기업들이 많으나, 중국의 임금상승과 중일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 밖으로 거점을 분산하는 이른바 「China+1」의 움직임이 확산
  - JICA가 새로운 생산거점의 후보 국가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베트남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미얀마 등이 유력
- 일본정부는 임대공장단지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국에 진출해있는 일본중소기업들의 제3국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기업의 관심이 높으나 중소기업용 공업단지가 부족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임

## □ 일본 대기업 공동으로, 보잉사의 항공기 생산혁신사업에 참여

- 미쯔비시중공업과 도레이 등 8개 대기업들과 동경대학이 미국 보잉사와 항공기의 생산혁신 사업을 추진
  - 일본 기업들은 주요 항공기용 소재와 부품을 납품해왔는데, 이번에는 각사 공동으로 생산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납기를 최대 30% 단축하여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항공기 수요를 확보할 계획
  - 현재 보잉사는 최신기종 787의 주날개 등 구조부품의 35%를 일본 업체에 생산 위탁하고 있음
  - 일본기업 측은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제한하지 않고, 경쟁력 향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임
- 항공기 제조공정 전체를 총괄하는 동경대학의 생산기술연구소 산하에, 날개 등 기체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미쯔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후지중공업이 참여
  - 신규로 탄소섬유를 공급하는 도레이와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DMG모리세이키(森精機), 절삭공구 제조업체인 스미토모전공하드메탈, 미쯔비시머티리얼, OSG 등도 참여
  - 업체 단독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대학이 연대하여 새로운 발상으로 성과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임
- 동경대학에 각사의 기술담당자들이 모여 부품의 가공 및 조립 공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
  - 생산 공정 단축 등을 통하여 탄소섬유복합재와 티탄, 알루미늄합금 등의 소재로부터 부품을 제조하는 열에너지를 30% 줄여 생산성을 50%가까이 높일 계획인데, 2017년까지 공동연구를 계속
- 공동 개발한 기술이나 공법은 특허 등으로 묶어두지 않고, 각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비는 각사가 부담하는 외에 경제산업성도 지원을 실시
  - 미래에는 항공기에 국한하지 않고, 항공엔진, 자동차, 산업기계의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인데, 계측제어기기업체 등도 참여시켜 30~40개사의 조직으로 키운다는 구상임

## 5 한국관련워치

### □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주요 결과

-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업국(SIPO), 일본 특허청(JIPO)이 11월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제13회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3국간 특허심사판단방식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
  - 각국 기업들이 제3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주의사항과 3국의 법령·심사 기준의 차이점 등에 관한 3국 공동 웹사이트「TRIPO」를 공개하기로 결정
  - \* KIPO, SIPO, JIPO는 지적재산의 보호·강화, 특허심사의 신속화·품질향상, 제도의 조화추진 등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심사실무의 각국간 비교, IT화, 인재육성 등 광범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실시

### ○ 13차 회의 주요 내용

#### △ 특허분야 협력

- 3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운용 관련 비교연구와 함께, 그동안 특허요건인 「진보성」, 「신규성」 및 「실용신안제도」를 테마로 다루어왔는데, 최근 실무상 중요한 출원서류의 기재요건에 관한 심사기준의 비교연구결과를 공표
- 특허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3국 특허청의 전문가들이 각 청의 시스템에 관한 정보교환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합의

#### △ 의장분야 협력

- 한중일 특허청이 공동으로 의장제도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는 「한중일 디자인포럼(2012년 11월 동경에서 개최)」의 의의와 기대효과 등에 관한 인식 공유

#### △ 기계화 분야 협력

- 각국의 특허관련 정보에 관한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전략 등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를 위한 정보기반을 3국 공동으로 정비하는데 필요하다는 리포트를 공표

△ 심판분야 협력

- 금년 8월 처음으로 개최한 한중일 심판전문가 회의의 유익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각국의 심판제도와 통계데이터에 관한 정보 교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국의 심판절차에 관한 차이점을 연구하기로 합의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협력

- 일본의 제안으로 한중일의 특허청에서 각국의 제도에 관한 의견교환과 연구에 착수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 일본의 대형 예능기획사 한국의 예능기획사 매수

- 일본의 대형 예능기획사 아뮤즈가 한국의 예능기획사를 매수하기로 발표했다고 넷케이신문이 보도
  - 매수대상은 2004년 설립된 칸엔터프라이즈로 2012년 매출액은 8억2,600만원 (약 7,400만엔)
  - 매수가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동사의 주식 80%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흡수
    - 칸엔터프라이즈는 한국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 및 TV드라마 제작을 담당하게 되는데, 11월 12일 아뮤즈사가 동사의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
- 아뮤즈사는 2000년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본 예능인들의 활동 및 선전을 담당해왔는데, 칸엔터프라이즈를 자회사화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네트워크 확대와 한일 공동 신사업 창출을 목표

□ 요도카와제강소, 포스코와 주식 상호보유

- 요도카와(淀川)제강소가 11월 8일 포스코와 주식을 상호보유하기로 발표
  - 요도카와는 주식 300만주를(발행완료주식의 1.62%) 11월 25일부로 포스코에 할당하게 되는데(주당 할당가격은 439엔), 이에 따라 포스코는 요도카와제강소의 제9대 주주가 됨
  - 요도카와제강소는 약 13억 엔을 투자하여 포스코의 주식을 취득할 방침
- 요도카와제강소는 컬러강판과 도금강판이 주력상품인데, 포스코로부터 주원료인 열연강판을 조달하고 있음